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짱뽕어탕

짱뽕어. 이름과 생김새는 물론 생물학적 특징과 생활양식, 심지어는 잡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독특한 생선이다. 우선 된소리가 이어지는 명칭 자체가 한 번만 들어도 머리에 쏙 들어온다. 이걸 순화한답시고 '장동어'라 점잖게 불렀다가는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

유난히 큰 머리 위에 두 눈이 툭 볼거져 있고 생김새나 크기에 어울리지 않게 크고 화려한 등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좀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운, 한마디로 과장하게 생긴 녀석이다. '자산어보'에서는 눈이 튀어나온 모양을 두고 불룩한 '철'자와 눈 '목'자를 써서 철목어라 불렀다.

공기호흡을 할 수 있어 어가기는 물론이고 폐로도 숨을 쉰다. 그래서 썰물 때면 가슴지느러미를 이용해 갯벌을 헤집고 다니며 먹이 사냥을 한다. 때로는 꼬리힘을 이용해 상당한 높이로 도약을하기도 하는데, 이는 수컷이 짝짓기를 위해 암컷을 유혹하는 행위다. 이런 성형 탓에 갯벌을 많이 쪼이며 자란 짱뽕어는 비린내가 나지 않아 탕이나 전골로 끓이기에 그만이다. 여름철 갯벌에 나가면 짱뽕어의 기행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

다. 소리에 민감한 짱뽕어는 갯벌에 나와 머리를 쳐들고 있다가도, 다가가면 순식간에 구멍 속으로 몸을 숨기므로 여간해선 잡기 어렵다. 긴 낚싯줄에 추와 바늘을 달아 짱뽕어가 뛰어다니는 지점에 정확히 낚시바늘을 떨어뜨려 채 올리는데 이를 '홀치기'라고 한다. 뱀배를 타고 다니며 노련하게 짱뽕어를 낚아채는 모습은 순천·강진 그리고 신안 증도 등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물이기도 하다.

짱뽕어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는 과거 영암군 삼호면 갯벌이 유명했지만 방조제가 생기면서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요즘은 여수·순천·보성·강진·해남 등 바닷가에 주로 잡힌다. 한때는 돼지 먹이 줄 만큼 흔하게 잡혔으나, 곳곳의 방조제 공사와 오염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정정 갯벌에서만 사는 짱뽕어는 인공 양식도 되지 않는다. 2011년 처음으로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서 인공종묘에 성공한 이후, 가끔 어린 짱뽕어를 대량으로 방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먹는 짱뽕어는 모두가 자연산이고 따라서 산지가 아니면 좀처럼 맛볼 수 없는 생선이다.

부산 출신인 나는 10여 년쯤 전 짱뽕어탕을 처음 맛봤다. 순천의 대표 보양 음식이지만 1980년대가 되어서야 언론을 통해 그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으니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음식이었다. 유별난 이름에 이끌려 시켰다가 순식간에 매료된 음식이다.

짱뽕어탕은 겉으로 봐서는 추어탕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몸통은 으깨졌으니 분간할 수 없고, 시래기·숙주·애호박·토란대 등 내용물 또한 비슷하다. 다진 마늘과 청양고추 그리고 방앗잎이나 제피가루를 곁들여 올려서 맛 또한 추어탕과 동일하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맛에서 차이가 난다. 짱뽕어는 그 생김새와는 달리 의외로 고급스럽고 조신한 맛이다. 심지어는 약간 맛있는 맛 때문에 처음에는 가우뚱하게 된다. 하지만 바닷고기 특유의 시원함 때문에 자꾸만 숟가락을 담고간다. 약간의 들깨와 된장이 사용되지만 그렇다고 시원함이 주눅들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안단테' 정도의 속도도 손이 움직이지만 개운함 속에 감춰진 깊은 맛이 느껴지는 순간, 손의 움직임은 '알레고로' 정도로 빨라진다. 그러다 보면 인기척에 놀라 개펄로 숨어드는 짱뽕어의 속

도만큼이나 빠르게 망 한 그릇을 비우고 만다. 전날 술이라도 마신 경우라면, 땀은 비 오듯 쏟아지는데 속은 점점 편해짐을 느낄 수 있다. 비린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먹은 후에도 뭇 먹었는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다.

이때때 남도를 찾으면 짱뽕어탕과 함께 상에 오르는 반찬이 있다. 칠게로 담근 계장이다. 전라도의 어부들은 갯벌에서 잡은 게는 찢투게, 바위뿔에서 잡은 게는 찢투게로 구분하기도 한다. 튀겨 먹거나 쪄 먹거나 계장을 담그는 칠게는 갯벌이 주는 숨은 별미로 남도의 상차림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게 한 마리를 통째로 오도독오도독 씹어 먹으면 내음이 입안 가득 퍼진다. 짜지 않고 심심한 것이 밥반찬으로 제격이다. 게 향이 녹아난 국물을 슬쩍 부어 밥을 비비면 이 또한 별미다. 몸이 허해지면 여름철을 짱뽕어탕과 칠게장 조합으로 이겨낸 선조들의 지혜가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하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짱뽕어와 칠게를 생각하니 불현듯 서글퍼진다. 짱뽕어가 무시로 뛰어오르고 칠게 때가 군무를 추는 여름 갯벌을 우리는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맛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우리 엄마 고관절 골절 수술해도 되나요?



김종선 첨단수리병원 병원장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아흔살인 부모님이 고관절 골절이라면 어떻게 할까?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아야 하나? 수술을 안 하면 어떨까? 수술하다 들어가시면 어찌지? 앞으로 10년은 더 살텐데, 10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통증을 견딜 수 있을까? 등등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필자는 노인 골절 환자를 많이 접하고 있다. 보호자들이 나이 많은 노인이 무순 수술이냐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 또 죽어도 수술은 못 받겠다던 환자가 심한 통증과 일상의 불편함 때문에 다시 찾아와 수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50세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

면, 이로 인한 1년 내 사망률이 25%로 자궁 내막암의 네 배라 하니 사망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말기 암 환자가 고관절에 암세포가 전이돼 골절이 발생한 경우도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

많은 의사들은 기대 수명이 6개월일지라도 골절 수술을 권유한다. 왜 그럴까? 골절로 인한 통증이 어르신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많은 불편을 드리기 때문이다. 대소변을 볼 때 다리를 벌리는 동작이 제대로 돼야 원만하게 뒷처리 할 수 있다. 몸을 이리저리 뒤집을 수 있어야 욕창도 생기지 않는다.

나이 든 부모가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 자식들은 여러 모로 걱정이 많아진다. 통증이 심해서서 무엇을 해 드리기는 해야 하는데 고령이라 수술은 위험할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한 수술 방법은 없는 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엔 고령 환자에 맞춰서 수술 방법이 개발됐고, 보통 수술 후 2-3일부터는 보행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중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 수술은 대개 부분 마취로도 가능하다. 근육이 부

족한 마른 체형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특히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기 쉽다. 퇴행성 변화로 위장 용량이 적어서야 입맛이 떨어져 더는 식사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발생한 분들은 입맛이 없더라도 식사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 한 번에 많이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량으로 자주 드셔야 하고, 자식들은 부모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알아서 잘 갖다 드려야 한다. 식사를 잘 못 하는 분들이 수술 후에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식사를 잘 드셔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상처 부위가 잘 나아져 감염이 잘 생기지 않는다.

수술 후에 가끔은 젊은 사람 피를 수혈하게 되는데, 수혈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수혈이 오히려 치매 노인들에게는 일상생활 능력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노인이 척추 수술을 하면 오래 산다는 논문이 국내에 발표됐다. 결국 척추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이 사라지면 곧는 운동도 활발해지면 궁극적으로 오래 살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고관절 수술도 마찬가지이다. 고관절 수술 후에 바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면 장 운동도 활발해지

고, 혈액 순환이 좋아져 전신이 건강해진다.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앉거나 누울 때도 천천히 움직이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항상 난간을 붙잡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고, 필요한 경우 지팡이를 사용해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소 꾸준히 햇볕을 쬐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고, 칼슘을 많이 섭취하고, 나트륨과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는 분들의 1년 내 사망률이 네 명 중 한명이라는 통계가 있지만 필자 경험상으로는 열 명 중에 한 명 정도 되는 것 같다. 90%나 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고, 외래에 오는 얼굴로 오실 때면 수술할 때 굉장한 해진 가슴으로 정성껏 치료했던 나의 고생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

보호자가 환자는 걱정이 앞설 것이다. 하지만 의료진을 믿고 수술의 위험성과 효과, 수술 후 삶의 질 등을 자세히 들은 뒤 부모님들이 고통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이정희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최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파업이 있었다. 도시락을 지원하고 등교하는 학생,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신하는 학교 등 급식 대란이 일어났다. 학생들을 볼모로 집단 이기주의를 분출한다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있었다. 반대로 파업을 지지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단체들의 성명이 발표되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도로공사, 가스공사, 분당 서울대병원 등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실제 인건공정화차 비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혼란한 공공 부문 정규직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 후인 2017년 5월 12일 인건공정화를 찾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

언했다. 대통령의 업무 지시 1호였다.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 복지, 고용을 차별하는 후진적 구조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공 부문부터 우선 비정규직을 없애고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같은 달 16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하고,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핵심은 상사·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것은 노사 협의의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 부문부터 풀어가겠다는 정부의 구상과 의지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언 이후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 정규직화 진행 과정과 성과를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현장에서는 갈등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율이 84%가 넘는 등 공공 기관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 문제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채용 개선은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정규직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채용 개

선도 더디고, '무늬만 정규직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 전환은 미봉책 일 뿐 직접 고용 방식이 아니므로 풀어야 나아진 게 없고 향후 구조 조정 위험도 크며 노사 분규로 맞서고 있다.

비정규직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수십 년간 쌓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다 보니 발생한 것이다. 국가 중대 현안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정부는 정규직화를 자율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별로 전환 방식과 성과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한다. 채용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계획, 로드맵 부재를 문제의 주인으로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따라서 전환 이후 임금·채우 수준, 예산·정원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노사 합의에 물꼬를 터 줘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직접 고용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기존 정규직 노조의 반발이나 입장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라는 대의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고용 경직성 증대에 따른 청

년 일자리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여 좀 더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한전의 경우 8555명의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무 회의 50회, 분과 회의 50여회 등 무려 100여 차례 이상의 소통 회의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재원 확보 방안, 대안별 장단점 등을 논의한 결과, 정규직 전환은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추진하되 채용 개선은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금까지 7019명의 정규직화가 마무리되었으며, 나머지 전환 대상자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의 틀 속에서,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

비정규직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영 효율화, 고용 시장 유연성 제고 등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국 정규직 전환 문제는 단지 정부의 의지만으로 관철시키기는 어렵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살피고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는 사회적 대화협이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社說

태풍 피해 가거도 방파제 언제쯤 제대로 되나

'국토 최서남단'에 위치한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 방파제가 완공된 때는 지난 2008년 6월이었다. 1978년 8월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이듬해 7월부터 방파제 공사가 시작된 지 30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다. 2011년 태풍 '루미파'와 2012년 '볼라벤'이 연속해서 태풍의 이동 경로상에 놓인 가거도를 강타해, 방파제 480m 가운데 무려 350m가 파손되는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당시 강력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64t짜리 테트라포드(네 개의 뿔 모양으로 생긴 콘크리트 블록)가 마을 앞까지 밀려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초대형 태풍에도 끄떡없는 '슈퍼 방파제'를 만들겠다고 2013년부터 방파제 복구·증축 공사에 착수했다. 당초 완공 목표는 2018년 말이었지만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공정률 65%)되고 있다. 공법 변경과 도급사 간 법적 분쟁, 공사 비리 의혹 수사 등을 겪으면

서 공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태풍 '다나스'로 인해 가거도항 복구공사 현장에 적재해 둔 방파제 사석(捨石·방파제 등을 건설하기 전에 지반 보강을 위해 땅에 까는 쇠석) 1만3000㎡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내년 말 예정인 방파제 완공이 또다시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가거도는 '가히(可) 살만한(居) 섬(島)'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주민 500여 명은 태풍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튼튼한 방파제 완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해마다 태풍은 오는데, 복구공사로만 벌써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형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가거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

'일회용품 천지' 구두선에 그친 친환경대회

'친환경'을 표방하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운영 과정에서 일회용품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수촌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 식기류가 60만 개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회는 물론 도시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선수촌 내 선수 식당의 식기류 가운데 접시와 국그릇은 종이, 숟가락과 포크·나이프는 플라스틱, 찻가락은 나무로 만들어진 일회용품 제품이다. 선수촌 대회가 열리는 17일간 하루 평균 5800명분의 식사가 제공되고 한 끼에 1인당 여섯 개씩의 식기류가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59만1600개의 일회용 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선수 식당이 아닌 취재진이 이용하는 미디어 식당과 보안요 있고, 선수권대회에 이어 마스터즈대회(8월 5일-18일)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회용품 쓰레기는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대회 조직위는 일회용 식기류 사용이 선수들의 위생과 종교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년 전 광주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에는 더 많은 선수가 참가했는데도 접시와 수저 등 공동 식기류를 세척해 사용한 바 있다. 더욱이 당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감염에 민감한 시기였지만 U대회 선수촌 식당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한 건의 식중독 사고 없이 대회를 치러 냈다.

특히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광주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축제 때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해양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등이 세계적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은 국제적 흐름은 물론 이번 대회의 취지에도 역행한다. 조직위는 지금이라도 일회용품을 대체하거나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전남에 공식적으로 일본인이 처음 발을 디딘 것은 목포가 개항한 지 13일이 지난 1897년 10월 14일이었다. 1930년 발간된 목포부사(木浦府使)에 따르면 일본 승려인 오쿠무라 엔신과 그의 여동생 이오코는 친일 관찰사 윤운렬의 도움을 받아 동구 황금동·불로동 일대에 사원을 지었다. 이듬해인 1898년 4월엔 일본인 이주자 아홉 명과 함께 실험학교를 짓기도 했다.

이후 사실상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에는 일제의 적극적인 이주 정책으로 북돋움처럼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1940년 광주 인구 6만463명 가운데 7878명이 일본인이었다. 이들은 돈벌이와 편의를 위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상업시설을 장악했다. 또한 광주유성과 그 내부의 동헌·서헌·객사·희경루 등 조선의 역사적인 건물을 철거해 상가들을 만들었다.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한 1906년 목포에 이사청을, 광주에 부이사청을 각각 설치하며 지역 장악에 나섰다. 같은 해 3월 호남 각지의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광주·목포 간 도로공사도 시작했다.

해방과 함께 일제와 일본인들은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일제가 만든 법과 제도는 1961년 '구법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1962년 1월에서야 폐지됐다. 일제의 법·제도가 17년간이나 존속된 것이다. 그런데 일제에 부여한 친일 세력은 제대로 된 단죄 한 번 없이 민족 배반으로 얻은 호사를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다. 단죄가 없으니 반성도 없었다. 그들은 일제와 일본인에게 배우고 익혔던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나라의 상류층으로 자리하고 있다.

일제와 일본

1965년 일본군 장교 출신 대통령이 맺은 한일협정을 핑계 삼아 사죄 한 번 없이 경제제재에 나선 아베 정권에서 과거 일제의 모습을 본다. 국제법을 들먹이고 경제적인 우위와 힘을 과시하며 압박하는 방식은 과거와 판박이다.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일본에 그들의 편에 섰던 친일 세력까지 더해진다던 또 한 번의 혼돈과 분란 역시 불가피할 것이다. 과거 친일 세력이 그랬듯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집어치우고, 다소 어려움을 겪더라도 당당하게 대처해 민족과 역사 앞에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유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牧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월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건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